

대법원 2024도8835 살인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고, 상해 및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83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부부 사이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 피해자가 2023. 3. 8.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계좌에 잔액이 없고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시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피고인의 손과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여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의식소실 상태에 놓이

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소실 상태를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여행용 가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움
-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93.1km 내지 95.7km로 직진하면서 좌측 대각선 방향에 설치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32,34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기수),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73,731,589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침(미수)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유죄

■ 징역 35년, 승용차 몰수

나. 원심 ➡ 피고인 항소기각

-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손과 팔을 이용하여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의식을 소실케 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수 시간을 방치한 후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가함으로써 살해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일부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의 맥박 및 심폐기능이 중지되는 등 피해자가 영원히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망 시

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인이 고의로 손과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부를 압박하여 질식 및 의식소실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만한 합리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경부압박부터 교통사고에 이르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 ▣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

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고려한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이며,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함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장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